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58
----------	-----

제안년월일: 2018년 11월 16일

제안자: 교육위원장

1. 주 문

- 국정감사 기간 중 박용진 국회의원에 의해 공개된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보면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기관으로서 공공재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 드러났음.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는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로서 공공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고 책임감 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함.

2. 제안이유

- 2018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013년~2017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전국 유치원 6,153곳 중 약 1/3인 2,05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1,878개 유치원이 적발되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실명, 주소 등이 공개됨.

- 특히 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의 상당 부분이 회계부정이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박용진 국회의원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박용진 3법」을 발의하였으나 국회 교육위원회 심의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사립유치원 회계관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립학교 비리근절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함.

3.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이 송 처 : 국회, 교육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결의안

최근 교육계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문제로 인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18년 국정감사중 박용진의원에게 의해 드러난 유치원 감사 결과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이를 목도한 국민들은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에 대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외치고 있다.

금번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유치원 감사 내역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유치원 6,153곳 중 2,058곳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1,878개(조사대상 기관 대비 91%)의 유치원에서 회계부정이 나타났다. 또한 2017년 2월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발표한 “유치원·어린이집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에서도 유치원 점검대상 55곳 중 54개 유치원에서 회계부정으로 인한 위반사항이 398건, 이에 따른 부당 사용금액이 1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치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유치원의 71%에 달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그 회계가 정부 지원금, 학부모부담금, 정부보조금이 구분되지 않고 관리되고 있어 17개 시도 전역에서 공적 제재를 받는 공립유치원에 비해 건전성과 투명성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행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이다. 이런 점에서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에 준하는 공공성이 요구되며 설립인가 당시에 공교육 목적으로 유치원 시설을 사용할 것을 표방하였으며 유치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밝혀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는 사립유치원이 당초 표방한 공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개인 영리사업자로서 활동해 왔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가 불건전, 불투명하며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런 공교육의 문제점을 적극 해소하고자 모든 유치원에서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구축·운영하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시·도 교육규칙에 따른 유치원회계를 설치·운영하며, 교육부령이 정하는 세입·세출항목에 따른 예산 편성·집행 및 관할 교육청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을 의무화하고, 무상교육 지원 시 유치원에 대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회의 법안심의 진행상황을 보면 유치원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특정 이익 집단의 눈치를 살피며 고의적으로 심의를 지연하는 등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어 또 다른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완벽한 대안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금번에 심의중인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3법은 사립유치원이 공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회계부정 등의 비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기관으로서 그 공적 책임을 다하고,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유아교육이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국회에 대해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회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즉시 중단하고 사립유치원이 공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하나, 국회는 특정 이익집단의 눈치 보기와 정치적 이념 갈등 조장으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심의를 지연하지 말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하라.

2018. 11. 1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